

'97년 보건복지예산의 주요내용 및 '98년 편성방향



文昌珍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

1. 1997년 예산의 주요내용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부문 예산규모는 1996년의 경우 GNP의 1.9%, 정부예산 대비 4.09%로 그 수준이 선진외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1997년 예산에서는 1996년 2월 발표된 『국민복지기본구상』의 실천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997년 일반회계와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합한 복지예산 총액은 1996년에 비해 18.7% 증가한 3조 2922억원으로 의료보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보육, 식품·의약품, 보건의료기술진흥 등이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서는 점증하는 국민복지욕구를 감안하여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을 2010년까지 재정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규모 증가율은 1996년부터 정부예산증가율을 상회하여 편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확충 의지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향후에도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1997년 복지부문 지원내용

(단위: 억원)

구 분		1996	1997	증 감	증가율(%)
공공 부조	생활보호	4,096	4,847	751	18.3
	의료보호	3,429	4,777	1,348	39.3
	소 계	7,575	9,624	2,049	27.0
사회 보험	의료보험	9,500	10,704	1,204	12.7
	국민연금	839	857	18	2.1
	소 계	1,422	1,700	278	19.5
사회 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847	1,300	453	53.5
	장애인복지	764	1,044	280	36.6
	보육아동	1,493	1,783	290	19.4
	여성기타	754	1,050	296	39.3
소 계	3,858	4,975	1,117	28.9	
보건 의료	보 건	1,102	1,229	127	11.5
	의 료	3,095	3,199	104	3.3
	식품·의약품	123	189	66	53.7
	보건의료기술진흥	462	611	149	32.3
	소 계	4,782	5,228	446	9.3
합 계		27,744	32,922	5,178	18.7

주: 일반회계 + 국립의료원특별회계 + 재정융자특별회계 + 농어촌 특별세관리특별회계 + 국유재산특별회계 합산

자료: 보건복지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 1997.

가.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1997년 현재 월소득 22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규범적인 목적과 사회통합을 위해 생계·의료·교육·자활보호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1997년에는 거택보호대상자 1인당 월평균 생계비 지원액을 8만 8천원에서 10만 9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교육보호와 의료보호를 합친 생계보호수준을 1인당 월 10만 7천원에서 13만 3천원으로 인상하여 최저생계비의 90% 수준을 보장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중 출산여성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출산수당을 신설하였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학비지원 대상을 1996년에는 중학생·실업고생 및 성적 30% 이내의 인문고생에서 1997년에는 전체 중·고교생(15만 1천명)까

1997년 일반회계와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합한 복지예산 총액은 1996년에 비해 18.7% 증가한 3조 2922억원으로 의료보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식품·의약품, 보건의료 기술진흥 등이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증액 및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 확대하였다. 또한 가구당 1천만원의 생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용자하도록 재특에서 49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세민의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지원센터 10개소의 운영비를 신규지원하여 창업·취업·생산협동조합 지원사업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의료보호 수가가 의료보험보다 낮고, 치료후에는 진료비 지불이 지체되고 있어 병원에서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1997년에는 의료보호예산을 39% 증액하여 진료비 지원을 늘리고, 의료보호수가에도 의료기관별 가산율을 일부 반영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준하여 급여기간을 240일에서 270일로 30일 연장하였다.

나. 사회보험의 확충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이 1997년 5월 실시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의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증액 및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또한 노동부 소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농어민·도시 자영자 등 비임금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 조합관리운영비 전액과 보험급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997년에는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급여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고 월채어, 보청기, 인공후두 등 필수적인 장애인보장구 4종을 급여범위에 포함하였다. 정부재정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업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중 50%를 지원하고 있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특회계에서 농어민연금 관리운영비 전액과 농어민 118만 4천명에게 1인당 월 2,2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증진

1997년에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개별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전문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노령수당 및 장애인 지원의 확대, 치매전문

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무의탁 아동·노인·부녀·장애인 및 부랑인 등 7만 7천여 명은 국가가 사회복지시설 807개소에 보호를 위탁하고 시설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997년에는 운영경비의 지원단가를 1996년보다 20% 이상 인상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치매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997년에 노인치매전문 요양병원 3개소를 신축하고 양로시설 등 각종 노인복지시설 31개를 신·증축하거나 장비보강을 위해 234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17만 4천→26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3만원에서 3만 5천원(80세 이상은 5만원)으로 인상하였다(참고로 선진 외국의 경우 연금 수급권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본은 70세 이상, 미국은 72세 이상, 영국은 80세 이상에 대해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25,777개소에 월 4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40개소와 가정봉사원과견센터 45개소에 대해 30억원의 운영예산을 지원하였으며, 3만명의 노인이 무료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1만 5천명에서 4만 2천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4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인상하였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대상도 교육보호와 같이 전체 인문고생까지 확대하였으며, 재특으로 지원되는 자립자금 융자규모도 70억원에서 84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10개소와 장애인 그룹홈 5개소가 문을 열 수 있도록 3억원을 지원하였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생계보호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생활용품비를 1인당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족적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1명과 4~5명의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 5개소가 운영되도록 개소당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치매의
사회문제화를 고려,
1997년에는
노인치매전문
요양병원 3개소를
신축하고 각종 노인
복지시설 31개를
신·증축하거나
장비보강을 위해
234억원을
지원하였다.

국민편의 위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주치의
등록제 시범사업,
외래진료예약시스템
구축 및 장기이식
정보센터 운영비 등
의료제도 관련예산
8억여 원을
편성하였다.

기혼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확충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97년에는 공공보육시설 1,100개소의 신·증축 및 직장보육시설 28개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 255억원을 반영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녀 7만 7천명의 보육료 감면 지원과 공공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1063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정부예산 이외에도 국민연금기금에서 민간보육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2500억원을 융자하고,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였다.

저소득층 부자·모자가정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재특에서 생업자금 40억원을 지원하고 장례식장과 납골당 건립을 위해 50억원을 융자·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 노인복지회관 7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7개소 및 여성회관 5개소의 신축비를 지원하였다.

라. 보건 및 의료기반 확충

국민편의 위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주치의 등록제 시범사업, 외래진료예약시스템 구축 및 장기이식정보센터 운영비 등 의료제도 관련예산 8억여 원을 편성하였다. 도시지역보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1997년에는 보건의료원·보건소 등 267개소의 신·증축 및 장비보강과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증·개축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 428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민간병원의 시설·장비보강을 위해 농특회계에서 340억원을 융자하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부족한 민간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재특회계에서 1350억원의 시설자금 및 장비구입자금을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하였다. 사망원인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의 진단,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를 지원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였고, 암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500병상 규모의 국립암센터를 1998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증가일로에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440병상 규모로 1998년 개

원에정인 국립충청정신병원의 신축예산을 지원하였고, 900병상 규모로 국립서울정신병원을 이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976억원의 총 공사비중 1차년도 예산으로 258억원을 국유재산특별회계 예산으로 반영하였다.

신생아 3,5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997년에는 대사이상 검사대상을 저소득층 출산아(3만 6천명)에서 전 신생아(61만명)로 확대하였다. 한의학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학 발전연구자금 30억원과 한방임상연구센터 신축설계 용역비 6억 3천만원 등 65억원을 한의학연구소에 출연금으로 지원하였다.

마.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으나 수입식품의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아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안전관리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식품과 의약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96년 4월 보건복지부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신설하였으며, 1997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보강 예산 152억원을 편성하였다.

바. 보건의료기술진흥

1997년에는 보건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보건의료관련산업을 국가성장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및 실용화가 필요한 의과학, 의약품, 식품과학, 의료생체공학 및 보건의료정보분야에 대한 기초과학기술, 기초응용기술, 기반기술, 실용화 기술 및 제품화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2. 199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998년 예산은 문민정부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의 기초를 충실히 유지하기 위하여 1996년 2월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

식품과 의약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96년 4월
보건복지부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본
부』를 신설하고
인력 및 장비보강
예산 152억원을
편성하였다.

소득·재산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 아니더라도 질병, 사고, 간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대해서도 생계를 지원하는 『한시적 생계보호』 제도가 1998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과 『노인·장애인복지 종합대책』 및 국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 강화

1998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을 100%까지 향상시켜 최저생활을 완전보장할 계획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중·고교생 12만 8천명에게 학업보조비를 지원하고 달동네 등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확충하며, 재특자금 450억원으로 영세민 7천가구에 대하여 세대당 1천 2백만원 한도의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가구소득이 4인가족 기준 월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 4천 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모자세대 및 부자세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7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소득·재산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 아니더라도 질병, 사고, 간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대해서도 생계를 지원하는 『한시적 생계보호』 제도가 1998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료보호수가의 단계적 인상으로 의료보험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비의 의료기관 중별 가산율(의원 10%, 병원 15%, 종합병원 23%, 3차 의료기관 30%)을 1997년 1/3수준에서 1998년 2/3수준까지 개선하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며, 1200억에 이르는 체불진료비 문제도 해결할 계획으로 있다.

나. 사회보험 확대 및 내실화

1998년 7월부터 도시자영자 890만명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하여 전국민연금시대를 펼칠 계획이며 아울러 2033년경에 국민연금적립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에 대비하여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6일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사회보장심의회

내에 설치된 바 있으며, 동 기획단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기초하여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보험의 경우 요양급여기간을 1997년 270일에서 연간 30일씩 연장하여 2000년에는 급여제한을 완전 폐지하며, 70세 이상 노인 틀니와 고가의료장비(MRI) 및 산전진찰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등 보험급여 범위와 수준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997년 현재 지역조합에 대한 보험급여비 국고지원 수준은 29%선에 머물고 있어 재정지원 규모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합간 재정공동사업(1997년 7667억원)과 지역조합에 대한 국고차등지원(1997년 1520억원) 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금년 7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생활보호 노인을 포함한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경로당은 30,401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노인여가시설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시설당 연간 6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와 난방비 지급액을 점차 인상해 나갈 것이다. 한편, 양로원·요양원·치매시설 등 132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과 운영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현재 45개소),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현재 40개소) 등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1급 장애인과 일부 2급 장애인에게 월 4만 5천원씩 지급하는 생계보조수당을 2급 장애인 전체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15,970명의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179개소)의 운영비 지원수준을 점차 확대하고, 재활 및 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의 신축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재특자금 84억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700세대에 대해 가구당 1200만원 한도로 운영되고 있는 자립자금 융자사업규모도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1998년 7월부터
도시지역자
890만명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하여
전국민연금시대를
펼칠 계획이며,
생활보호 노인을
포함한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육의 질적 개선과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
설치와 보육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소재시설과 장애아
및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난 199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보육사업확충 3개년대책』에 따라 그동안 보육시설 6,335개소가 확충되어 1997년 6월 현재 14,054개소로 늘어나게 되었고, 보육아동도 48만 4천명에 이르게 되어 양적인 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었다. 앞으로는 보육의 질적 개선과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 설치와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해 나가며,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소재 시설과 장애아 및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소년소녀가장(8,849세대, 1만 6천명)에 대한 지원수준을 점차 개선하고, 요보호아동 시설보호 및 사회적응훈련을 내실화하여 아동복지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선진화 구현

예방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담배 등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997년중 128억원 정도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금으로 질병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다. 또한, 500병상 규모의 『국립암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국가차원의 암관리를 위해 『국립암연구소』의 건립추진 및 암정복 10개년계획(1996~2005)에 따른 암예방 및 치료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신보건법』의 제정(1995년 12월)을 계기로 치료와 사회복지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78개의 정신요양시설을 매년 10개씩 정신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당 5억원씩 용자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신규설치 및 운영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립의료원의 기능을 2001년까지 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응급의료서비스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 의료기관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접근체계 개선,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혁신 및 장기이식관리체계를 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를 농어촌지역의 중추적 진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기능보강과 장비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을 농특회계에서 1997년 286억원 지원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농어촌민간병원의 시설·장비보강


을 위해 농특회계에서 1997년 340억원을 용자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그 지원수준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대도시 및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 및 지역보건의료 표준 S/W개발 등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의학의 육성을 위해 1997년 2월 한방정책관을 복지부에 신설한 바 있다. 한의과대학에 6억원씩 지원했던 한의학발전을 위한 연구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여온 한약규격품 유통제도가 갈근, 녹용 등 36종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바 있다. 앞으로 한약규격화를 위한 한약제 품질 표준화사업 및 한의학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독립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1997년에 대구·광주·대전 3개 지방청장의 직급을 국장급으로 승격시킨 데 이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장비보강과 지방청사의 단계적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립보건원의 연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1996년 신설된 특수질환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과학자 유치에 필요한 숙소건립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바. 보건의료산업의 전략적 육성지원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기술개발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보건의료기술개발전략(1996년 12월)』에 의하면 보건의료 관련 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중점 육성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여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단계별로 1조 5,540억원을 투입토록 되어있다. 이러한 전략하에 1998년에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개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구상으로 있다. 

1998년에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개발 투자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